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25. 03.

주) 에브리 리서치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25. 03.

주) 에브리 리서치 

제출문

인요한 국회의원 귀하

본 보고서를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영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03.

수행기관명 : (주)에브리리서치

연구책임자 :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박사

참여연구원 : (주)에브리리서치 이준기

(주)에브리리서치 서민지

제1장. 조사 개요	6
1. 조사 배경 및 목적	6
2. 조사 설계	7
3. 조사 내용	8
4. 조사 추진체계	9
5. 응답자 특성	10
6. 조사 결과 요약	12
제2장. 조사 결과	15
1. 의대 증원	15
2. 의사 집단행동	17
3. 의대생 수업 거부	19
4.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	21
4-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3
5.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25
6.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27
7. 지방 의료 붕괴 위기	29
8. 의료대란 해법	31
9. 의료 개혁	33
부록. 조사표	35

01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추진되었던, 의대 정원 확대는 당시 전공의 파업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불발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드러나 지역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필수 의료공백 등 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될 만큼 악화되어 의료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됨.

2025년 2월,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한 보고서와 각 대학교 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음. 하지만, KDI, 서울대 등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 의료계와 야권의 비판이 제기됨.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40명 정도인 소규모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여 500여 명에 이르는 단계적 증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음.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이후 의대 정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음. 의과대학이 아닌, 의과대학이 속한 각 대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로 주장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의대 증원 2천 명이 관철됨.

매우 파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휴학에 들어가 2025년 3월, 새 학기 시즌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과대학생 및 신입생들의 대거 미등록과 수업 거부 현상이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본 조사는 의대 증원, 의료계의 집단행동,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분쟁 이슈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 설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무선 ARS : 무선전화 번호 RDD (7,857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
표본수	최종 응답 500명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4\%p$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통계보정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 립가중 2025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기간	2025년 3월 7일 ~ 8일(양일간)
의뢰기관	인요한 국회의원실
실사기관	(주)에브리리서치

* 여론조사 개요

- 본 여론조사는 인요한 국회의원실 의뢰로 2025년 3월 7일 ~ 8일(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4\%p$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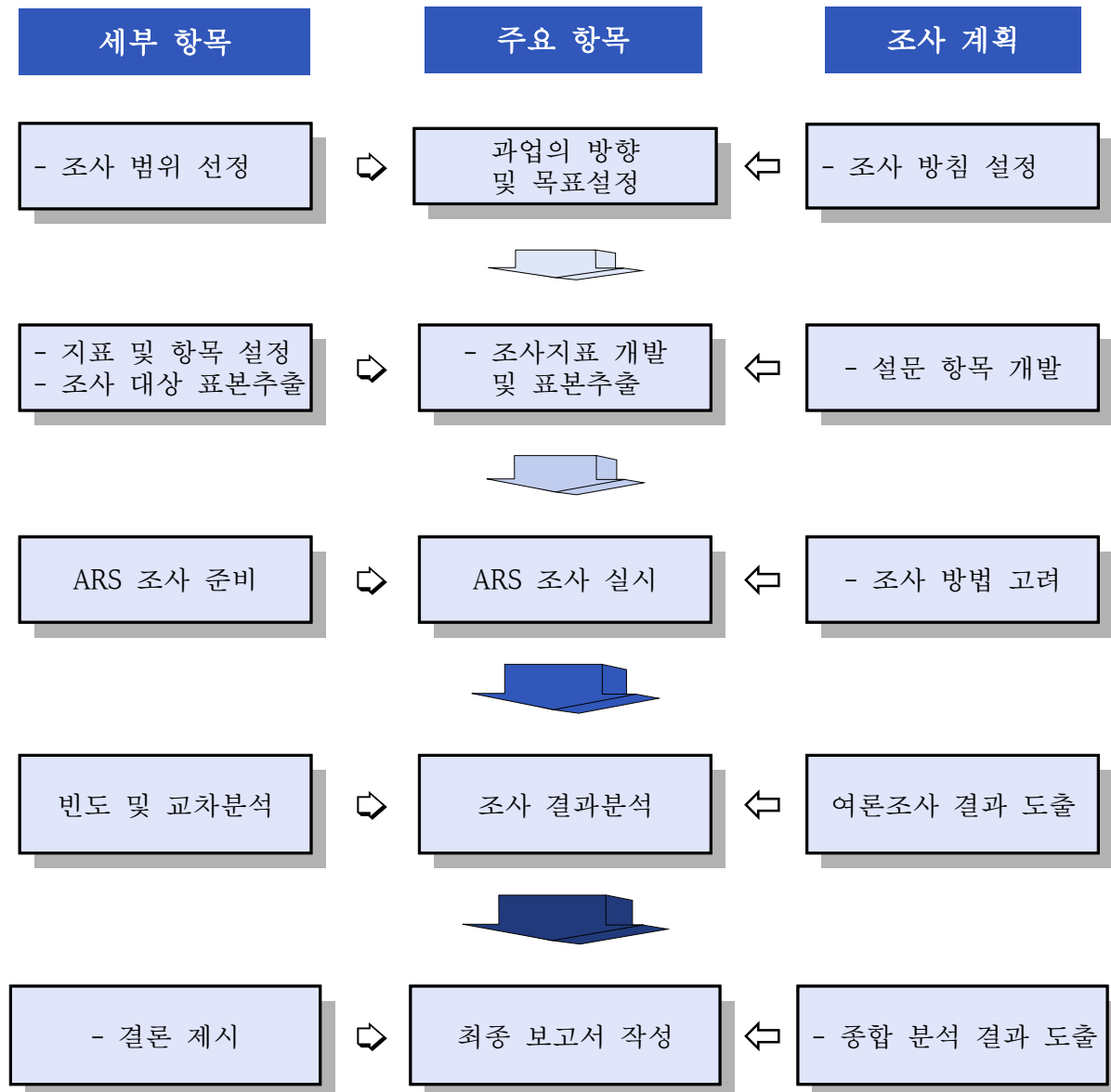
3. 조사 내용

〈표 1-3-1〉 의료정책 여론조사 내용

영역	조사항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지역
세부 내용	의대 증원
	의사 집단행동
	의대생 수업 거부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의료대란 해법
	의료 개혁

4. 조사 추진체계

〈표 1-4-1〉 세부 추진체계



5. 응답자 특성

〈표 1-5-1〉 전체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기준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A)	비율(%)	사례수(명) (B)	비율(%)	
전체		500	100.0	500	100.0	1.00
성별	남 성	276	55.2	247	49.4	0.89
	여 성	224	44.8	253	50.6	1.13
연령	18-29세	55	11.0	77	15.4	1.40
	30대	73	14.6	75	15.0	1.03
	40대	95	19.0	88	17.6	0.93
	50대	105	21.0	96	19.2	0.91
	60대	92	18.4	87	17.4	0.95
	70세 이상	80	16.0	77	15.4	0.96
지역	서울	114	22.8	94	18.8	0.82
	경기/인천	142	28.4	160	32.0	1.13
	대전/세종/충북/충남	40	8.0	55	11.0	1.38
	광주/전북/전남	49	9.8	48	9.6	0.98
	대구/경북	47	9.4	50	10.0	1.06
	부산/울산/경남	94	18.8	72	14.4	0.77
	강원/제주	14	2.8	21	4.2	1.50

〈표 1-5-2〉 조사 완료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완료 사례 수(명)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 수(명)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 체	합계	500	276	224	500	247	253
	18-29세	55	29	26	77	40	37
	30대	73	45	28	75	38	37
	40대	95	53	42	88	44	44
	50대	105	56	49	96	48	48
	60대	92	49	43	87	43	44
	70세 이상	80	44	36	77	34	43
서울	소계	114	57	57	94	45	49
	18-29세	12	4	8	17	8	9
	30대	23	15	8	16	8	8
	40대	16	7	9	16	8	8
	50대	14	8	6	16	8	8
	60대	26	11	15	15	7	8
	70세 이상	23	12	11	14	6	8
경기/인천	소계	142	76	66	160	80	80
	18-29세	21	14	7	25	13	12
	30대	29	16	13	27	14	13
	40대	29	14	15	30	15	15
	50대	31	15	16	32	16	16
	60대	20	12	8	26	13	13
	70세 이상	12	5	7	20	9	11
대전/세종/ 충북/충남	소계	40	25	15	55	27	28
	18-29세	5	3	2	8	4	4
	30대	3	3	0	8	4	4
	40대	11	7	4	10	5	5
	50대	11	7	4	10	5	5
	60대	4	2	2	10	5	5
	70세 이상	6	3	3	9	4	5
광주/전북/전남	소계	49	32	17	48	24	24
	18-29세	4	2	2	7	4	3
	30대	3	2	1	6	3	3
	40대	13	8	5	8	4	4
	50대	7	5	2	10	5	5
	60대	8	6	2	8	4	4
	70세 이상	14	9	5	9	4	5
대구/경북	소계	47	28	19	50	25	25
	18-29세	6	3	3	7	4	3
	30대	3	2	1	6	3	3
	40대	6	5	1	8	4	4
	50대	14	8	6	10	5	5
	60대	10	6	4	10	5	5
	70세 이상	8	4	4	9	4	5
부산/울산/경남	소계	94	51	43	72	35	37
	18-29세	7	3	4	10	5	5
	30대	10	6	4	10	5	5
	40대	17	11	6	12	6	6
	50대	22	9	13	14	7	7
	60대	22	11	11	14	7	7
	70세 이상	16	11	5	12	5	7
강원/제주	소계	14	7	7	21	11	10
	18-29세	-	-	-	3	2	1
	30대	2	1	1	2	1	1
	40대	3	1	2	4	2	2
	50대	6	4	2	4	2	2
	60대	2	1	1	4	2	2
	70세 이상	1	0	1	4	2	2

6. 조사 결과 요약

1)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의대생 복귀

- 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비중이 65.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와의 협상 25.5%, 전공의 요구 조건 수락 대기 7.4%로 나타남.
-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한 조사 결과, 복귀 후 수업 참여 75.8%, 정당한 권리행사 19.7%
- 의대 협회 및 의총협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안(3,058명)을 정부에서 이번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수용하였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에 따라 의정 갈등 장기화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분석됨.

2) 의사 인력 규모 및 의대 증원

- 의사 인력 부족 73.3%, 의사 인력 충분 13.5%, 의사 인력 초과 8.5%로 나타남.
-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으로 전공의 복귀 50.8%, 중증질환 전문응급실 개설 28.2%, 전국 응급실 네트워크 구축 14.4%, 진료비 인상 3.0%로 나타남.
- 지방 의료 붕괴 위기 항목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40.1%,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료인 연고지 근무 의무화 30.2%,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전형 확대 21.6%, 의료인 자율에 맡김 4.9%로 나타남.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장기간 필수 의료공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의사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의대 증원 확대 규모 조사 결과, (‘의사 인력 부족’ 에 응답한 366명 대상)
1,500명 이상 41.8%, 1,500명 미만 26.0%, 500명 미만 20.5%, 동결 4.0%로, 1,500명 이상 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의료공백 문제 최소화 여론이 높게 나타남.

3) 의료대란 해법 및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 의대 증원에 관한 의견으로 여의정 협의체 재개 38.7%, 의협의 대책 마련 28.7%,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화 24.3% 순으로 나타남.
- 정부의 의료대란 해법: 적절한 대책이다 38.2% vs 시간 끌기식 대책이다 36.1%로 나타남.
-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으로는 공공병원 추가 설립 36.5%, 의대 정원 확대 29.9%, 의료인 처우 개선 18.8%, 의료 수가 인상 8.8% 순으로 나타남.
-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사망사고 면책 도입,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 제도개선책에 대한 반응이 본 조사에서 비등하게 나타남. 또한 의협이나 정부 개별 입장을 대변하여 일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보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협심하여 협의체를 구성 후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국민 여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29.9%)보다 공공병원 추가 설립(36.5%)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으며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4) 의료 개혁 필요성

의료 개혁 필요성	의료개혁 찬성 88.1%		의료개혁 반대 9.1%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의료 개혁은 시기상조다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49.4%	38.7%	4.9%	4.2%

- 정부가 이번 3월 내 의대 학생 복귀를 전제하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항복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타남.
- 지난 2월,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MAC)는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의총협도 지난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부분 합의하였음.
-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교육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 이후 3,058명 안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정책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육부 손을 들어주어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방침은 그대로 강행될 전망.
- 본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의대 증원 백지화’ 방안이 의대생 복귀 및 의정갈등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미지수.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은 상호 간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최우선으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정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하여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정부와 맞춰가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며 국민 여론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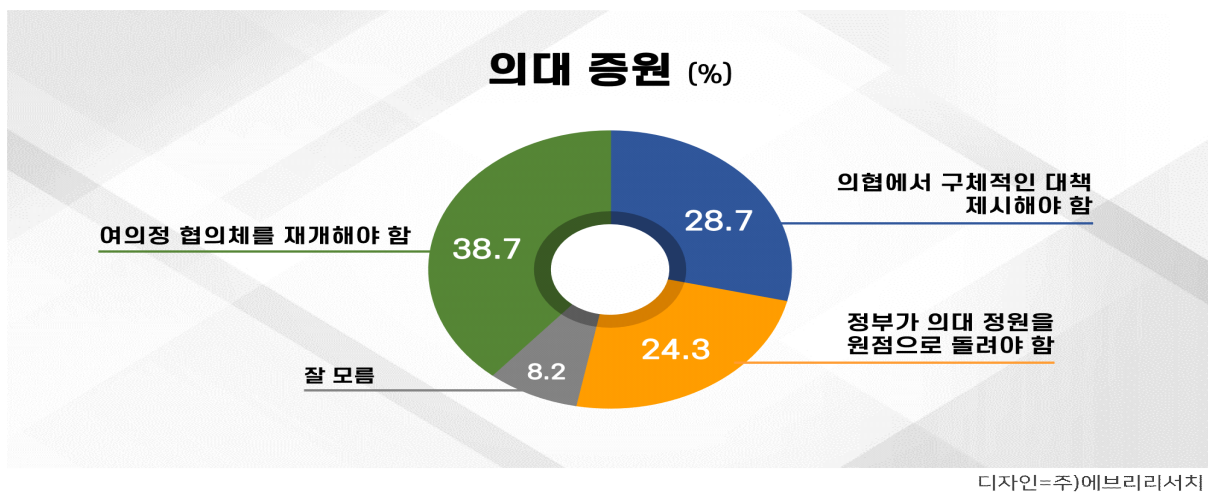
02 조사 결과



1. 의대 증원

질문)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38.7%,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8.7%,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24.3%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는 8.2%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남녀 모두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비중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남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28.3%)에, 여성은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31.3%)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조사 결과, 20대는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32.7%), 70세 이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28.8%)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30·40·50·60대에서는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서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34.6%),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33.3%)가 높게 나타남.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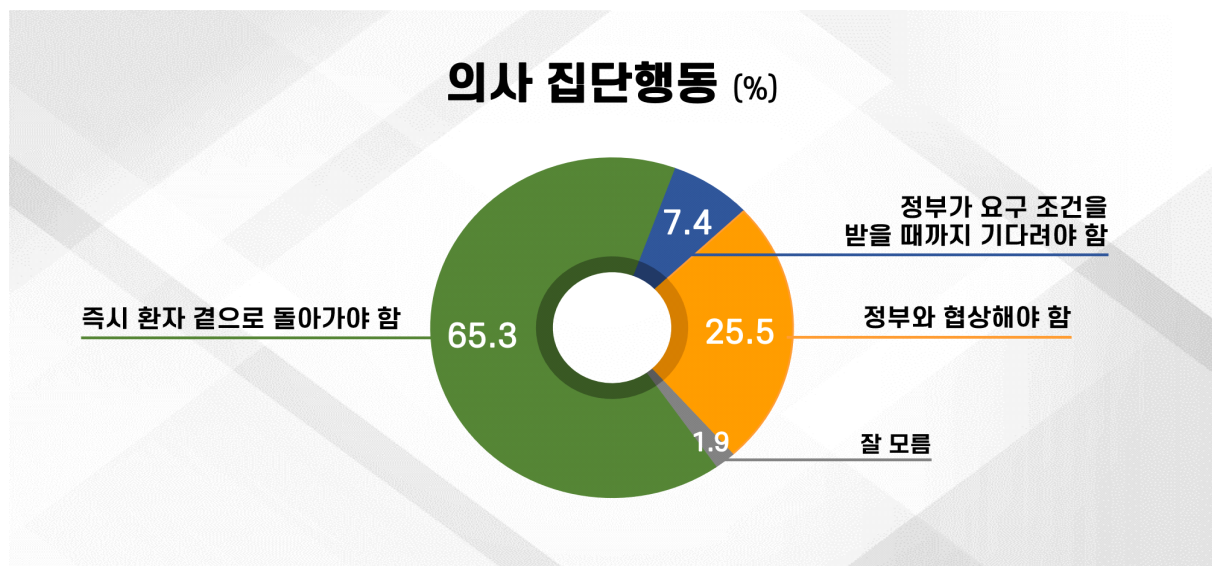
[표 1] 의대 증원

구분		사례 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 ①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38.7	28.7	24.3	8.2
성별	남성	276	247	40.2	26.1	28.3	5.4
	여성	224	253	37.2	31.3	20.5	10.9
연령	18-29세	55	77	32.3	32.7	28.6	6.4
	30대	73	75	38.6	38.3	18.5	4.6
	40대	95	88	42.5	30.0	24.1	3.4
	50대	105	96	47.8	28.0	20.1	4.2
	60대	92	87	39.9	26.4	26.6	7.1
	70세 이상	80	77	28.3	17.6	28.8	25.4
지역	서울	114	94	33.7	34.6	21.4	10.4
	경기/인천	142	160	45.5	22.7	25.8	6.0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32.2	29.9	28.5	9.4
	광주/전남/전북	49	48	31.5	28.8	33.3	6.5
	대구/경북	47	50	39.5	32.4	16.2	11.8
	부산/울산/경남	94	72	35.9	30.7	23.1	10.4
	강원/제주	14	21	50.7	30.3	19.0	0.0

2. 의사 집단행동

질문) 선생님께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65.3%,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25.5%,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4%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는 1.9%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여성 68.4%, 남성 62.1%가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에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70.4%로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 1.2%로 나타나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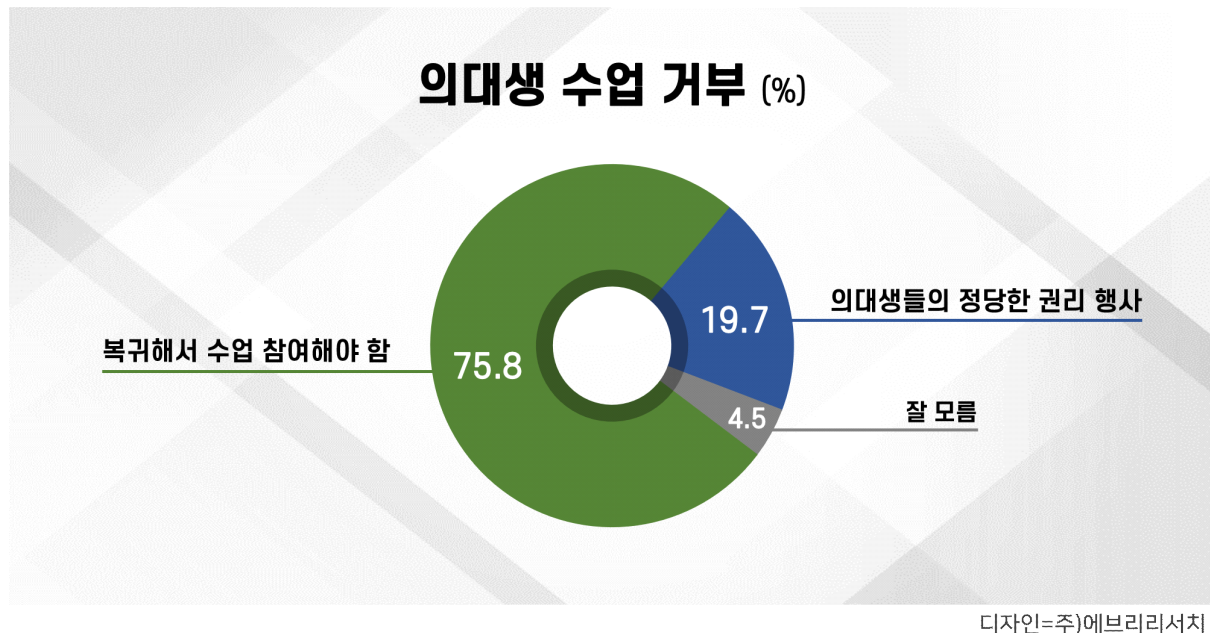
[표 2] 의사 집단행동

구분		사례 수		즉시 환자 결의로 돌아가야 한다 ①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②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65.3	7.4	25.5	1.9
성별	남성	276	247	62.1	9.4	26.5	2.0
	여성	224	253	68.4	5.4	24.5	1.8
연령	18-29세	55	77	62.2	9.9	24.7	3.2
	30대	73	75	69.4	6.7	22.9	1.0
	40대	95	88	65.1	3.7	29.8	1.4
	50대	105	96	61.1	7.3	30.5	1.1
	60대	92	87	64.7	9.0	25.2	1.1
	70세 이상	80	77	70.4	8.1	17.8	3.7
지역	서울	114	94	65.2	9.7	20.5	4.5
	경기/인천	142	160	63.2	6.4	28.3	2.1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69.6	4.9	25.5	0.0
	광주/전남/전북	49	48	61.8	11.1	24.5	2.6
	대구/경북	47	50	59.1	14.1	26.8	0.0
	부산/울산/경남	94	72	69.0	1.2	28.9	0.9
	강원/제주	14	21	79.5	7.1	13.4	0.0

3. 의대생 수업 거부

질문)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1,500명 늘어난 25학번 신입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75.8%,
‘의대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한다’ 19.7%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4.5%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의견에 여성 77.8%, 남성 73.7%가 동의하였음.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음. 특히, 70세 이상(81.4%), 30대(80.9%)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지역별 조사 결과, 전 지역에서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비중이 더 높았으며 강원/제주(86.9%), 대전/충남/충북/세종(82.5%)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시급한 복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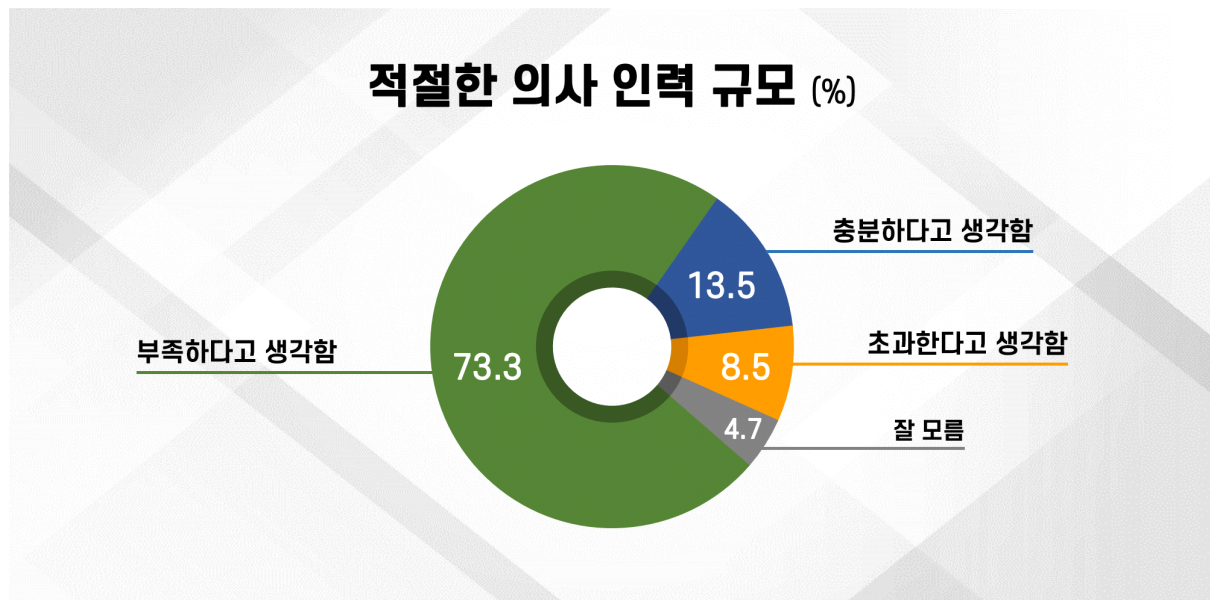
[표 3] 의대생 수업 거부

구분		사례 수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①	의대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75.8	19.7	4.5
성별	남성	276	247	73.7	22.3	4.0
	여성	224	253	77.8	17.2	5.0
연령	18-29세	55	77	73.3	23.2	3.5
	30대	73	75	80.9	16.9	2.2
	40대	95	88	74.3	22.0	3.6
	50대	105	96	68.5	25.0	6.6
	60대	92	87	78.0	19.9	2.1
	70세 이상	80	77	81.4	9.6	9.0
지역	서울	114	94	71.8	22.6	5.6
	경기/인천	142	160	75.5	20.2	4.3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82.5	17.5	0.0
	광주/전남/전북	49	48	71.9	23.3	4.8
	대구/경북	47	50	77.4	18.6	4.0
	부산/울산/경남	94	72	74.6	16.9	8.5
	강원/제주	14	21	86.9	13.1	0.0

4.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

질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3.3%,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3.5%,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8.5%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4.7%로 조사되었음.



디자인=주)에브리서치

- 성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사 인력에 대해 남녀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남성 74.1%, 여성 72.5%로 나타남.

- 연령대별 조사 결과, 18~29세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78.9%)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70세 이상에서는 67.7%로 비교적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지역별 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86.1%)로 가장 높았고, 서울 지역에서 65.5%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기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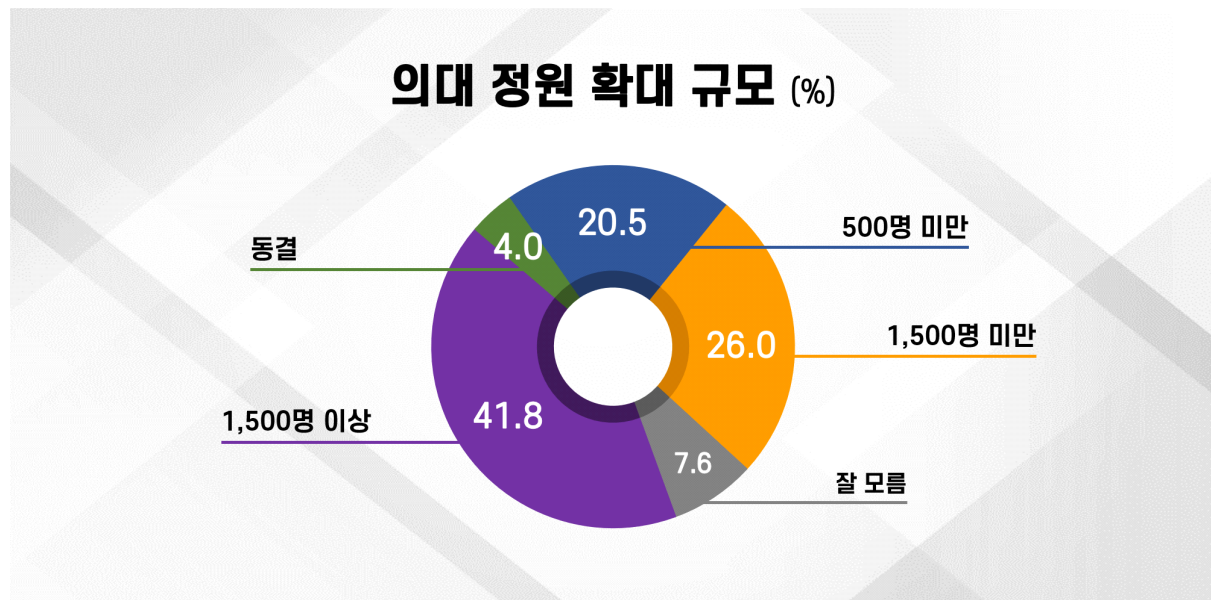
[표 4]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

구분		사례 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②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73.3	13.5	8.5	4.7
성별	남성	276	247	74.1	13.7	9.2	3.0
	여성	224	253	72.5	13.3	7.8	6.4
연령	18-29세	55	77	78.9	12.1	6.2	2.8
	30대	73	75	74.4	12.9	11.8	1.0
	40대	95	88	75.5	20.7	1.9	1.9
	50대	105	96	71.1	12.9	10.3	5.7
	60대	92	87	72.6	14.8	8.8	3.8
	70세 이상	80	77	67.6	6.4	12.7	13.4
지역	서울	114	94	65.5	19.2	8.9	6.3
	경기/인천	142	160	76.2	13.5	8.1	2.2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76.9	14.1	4.4	4.6
	광주/전남/전북	49	48	66.1	7.5	13.3	13.0
	대구/경북	47	50	86.1	5.3	6.2	2.4
	부산/울산/경남	94	72	68.6	15.2	10.3	5.8
	강원/제주	14	21	78.3	13.1	8.6	0.0

4-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질문)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366명 대상 조사 결과, ‘1,500명 이상’ 41.8%, ‘1,500명 미만’ 26.0%, ‘500명 미만’ 20.5%, ‘동결’ 4.0%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7.6%로 조사되었음.



디자인=주)에브리리서치

- 성별 조사 결과, 남녀 모두 ‘1,500명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각 44.8%, 38.8%로 나타남.
- 연령대별 조사 결과,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500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50대는 ‘1,500명 미만’ 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5%로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500명 미만’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머지 타 지역에서는 ‘1,5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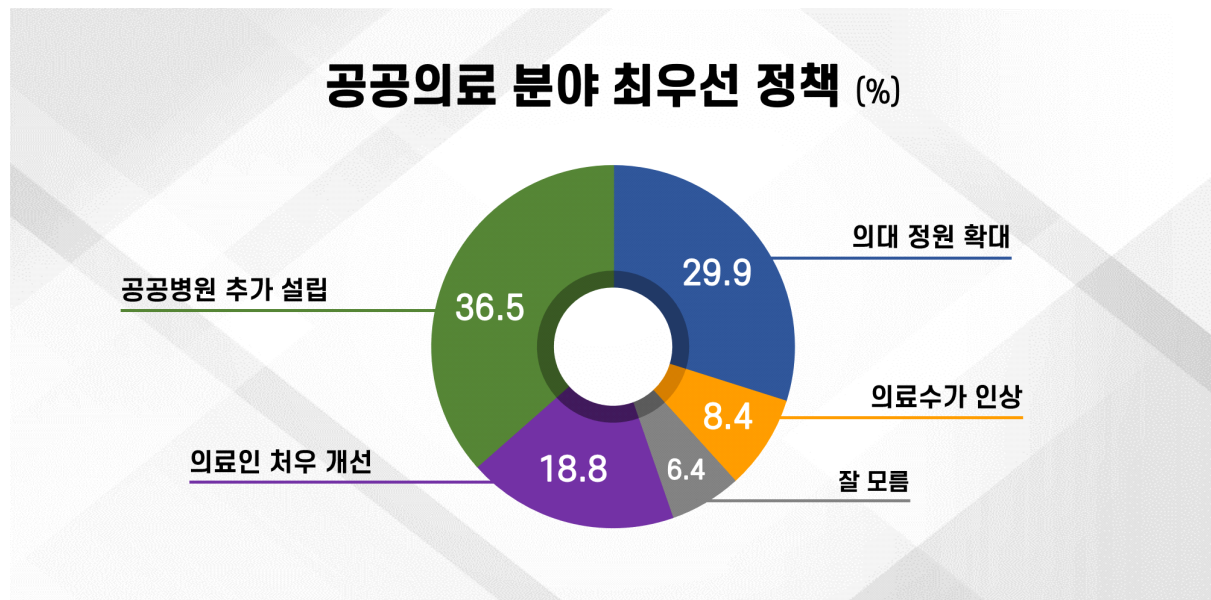
[표 4-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구분		사례 수		동결 ①	500명 미만 ②	1,500명 미만 ③	1,500명 이상 ④	잘 모르 겠다 ⑤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362	366	4.0	20.5	26.0	41.8	7.6
성별	남성	204	183	3.9	18.7	25.7	44.8	6.9
	여성	158	183	4.1	22.4	26.3	38.8	8.4
연령	18-29세	42	61	2.2	11.1	24.6	57.1	5.0
	30대	53	56	3.2	15.5	19.6	56.7	5.0
	40대	72	66	5.1	20.9	29.7	39.6	4.6
	50대	76	68	3.5	25.9	34.5	25.7	10.3
	60대	65	63	5.2	27.7	24.0	36.3	6.7
	70세 이상	54	52	4.8	20.6	21.0	38.7	14.9
지역	서울	75	62	3.8	18.3	20.6	52.2	5.1
	경기/인천	107	122	1.6	15.8	30.7	47.2	4.7
	대전/충남/충북/세종	30	42	3.4	30.8	25.8	33.1	6.8
	광주/전남/전북	32	32	6.1	17.0	20.8	47.1	9.0
	대구/경북	41	43	5.0	32.1	28.2	26.0	8.7
	부산/울산/경남	66	49	6.7	25.2	25.4	35.1	7.6
	강원/제주	11	16	9.6	0.0	18.4	36.5	35.5

5.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질문) 공공의료 분야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공공병원 추가 설립’ 36.5%, ‘의대 정원 확대’ 29.9%, ‘의료인 처우 개선’ 18.8%, ‘의료수가 인상’ 8.4%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6.4%로 조사되었음.



디자인=주)에브리리서치

- 성별 조사 결과, 남녀 모두 ‘공공병원 추가 설립’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39.5%, 33.5%로 가장 높았음.

- 연령대별 조사 결과, 20대(34.3%), 70세 이상(29.1%)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30·40·50·60대에서는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의대 정원 확대’ (50.5%)가 가장 높게 나타남.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공병원 추가 설립’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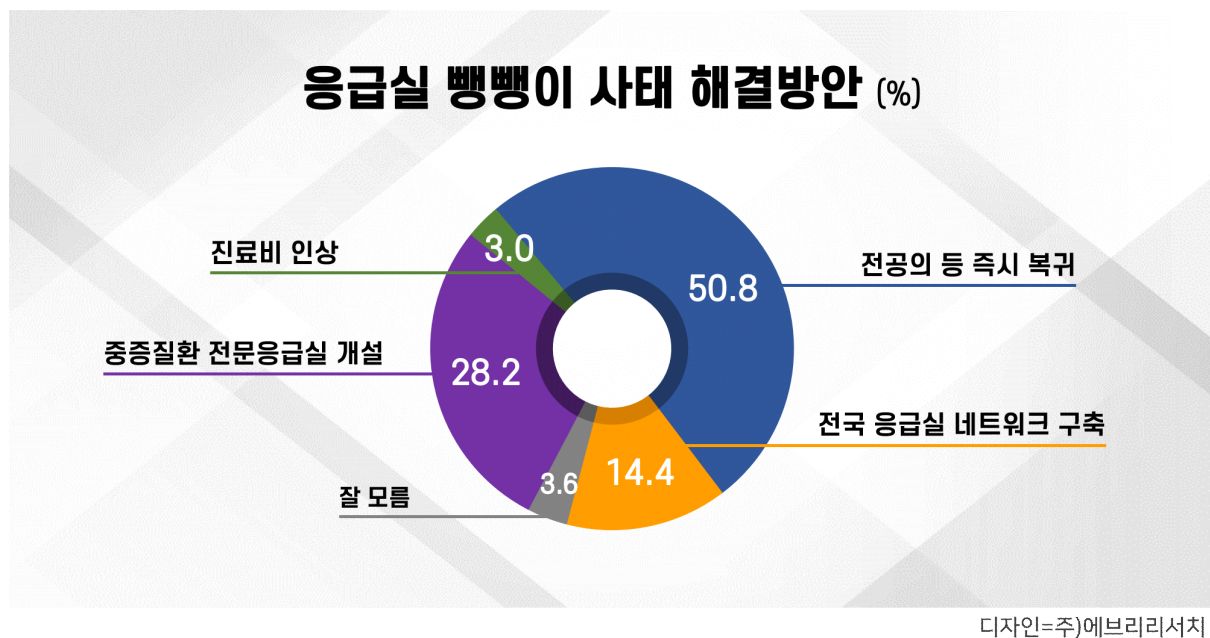
[표 5]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구분		사례 수		공공 병원 추가 설립 ①	의대 정원 확대 ②	의료 수가 인상 ③	의료인 처우 개선 ④	잘 모르 겠다 ⑤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36.5	29.9	8.4	18.8	6.4
성별	남성	276	247	39.5	32.1	11.0	14.1	3.2
	여성	224	253	33.5	27.8	5.8	23.4	9.4
연령	18-29세	55	77	26.6	34.3	13.4	23.6	2.2
	30대	73	75	38.5	34.0	10.2	15.5	1.8
	40대	95	88	37.4	28.9	13.4	17.2	3.1
	50대	105	96	44.7	26.9	2.4	20.3	5.7
	60대	92	87	42.1	27.8	6.1	15.6	8.3
	70세 이상	80	77	26.9	29.1	5.8	20.9	17.3
지역	서울	114	94	38.1	26.8	7.6	22.9	4.5
	경기/인천	142	160	34.8	28.3	13.0	19.5	4.3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40.0	36.3	0.0	16.5	7.2
	광주/전남/전북	49	48	42.1	29.8	7.8	12.4	7.8
	대구/경북	47	50	39.2	23.6	8.4	15.7	13.1
	부산/울산/경남	94	72	38.7	31.4	4.4	18.8	6.7
	강원/제주	14	21	5.8	50.5	13.1	23.0	7.5

6.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질문) 현재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전공의 등 즉시 복귀’ 50.8%, ‘중증질환 전문응급실 개설’ 28.2%, ‘전국 응급실 네트워크 구축’ 14.4%, ‘진료비 인상’ 3.0%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3.6%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으로 ‘전공의 등 즉시 복귀’에 여성 53.5%, 남성 48.0%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증질환 전문응급실 개설’이 여성 28.8%, 남성 27.6%로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이탈한 ‘전공의 등 즉시 복귀’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공의 등 즉시 복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진료비 인상’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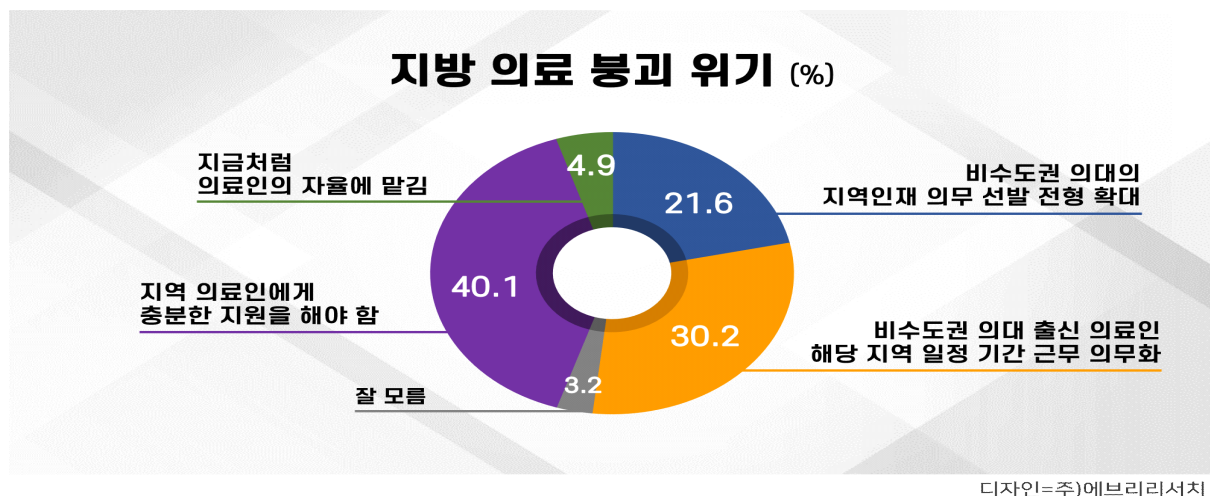
[표 6]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구분		사례 수		진료비 인상 ①	전공의 등 즉시 복귀 ②	전국 응급실 네트 워크 구축 ③	중증 질환 전문 응급실 개설 ④	잘 모르 겠다 ⑤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3.0	50.8	14.4	28.2	3.6
성별	남성	276	247	5.1	48.0	15.6	27.6	3.7
	여성	224	253	0.9	53.5	13.3	28.8	3.5
연령	18-29세	55	77	6.3	47.7	14.1	29.0	3.0
	30대	73	75	2.4	48.2	12.5	35.6	1.3
	40대	95	88	2.7	45.4	12.4	36.4	3.1
	50대	105	96	0.6	42.5	19.9	32.2	4.8
	60대	92	87	4.1	54.6	15.8	22.6	3.0
	70세 이상	80	77	2.2	68.7	10.5	12.3	6.3
지역	서울	114	94	6.3	43.8	14.5	28.7	6.6
	경기/인천	142	160	4.4	45.6	16.9	30.8	2.2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0.0	56.3	5.4	36.0	2.3
	광주/전남/전북	49	48	2.6	49.5	23.7	18.5	5.7
	대구/경북	47	50	0.0	59.0	15.2	23.4	2.4
	부산/울산/경남	94	72	0.9	55.2	10.8	30.6	2.5
	강원/제주	14	21	0.0	75.2	7.1	11.7	6.0

7. 지방 의료 붕괴 위기

질문) 의료인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40.1%,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의무화’ 30.2%,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전형 확대’ 21.6%,
 ‘지금처럼 의료인의 자출에 맡긴다’ 4.9%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3.2%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지방 의료 붕괴 위기 해결을 위해 남녀 모두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비수도권 의대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 의무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조사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았음. 70세 이상은 ‘비수도권 의대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 의무화’ (36.2%)에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지역별 조사 결과, 서울(37.5%), 광주/전남/전북(32.0%) 지역에서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 의무화’ 를, 나머지 지역에서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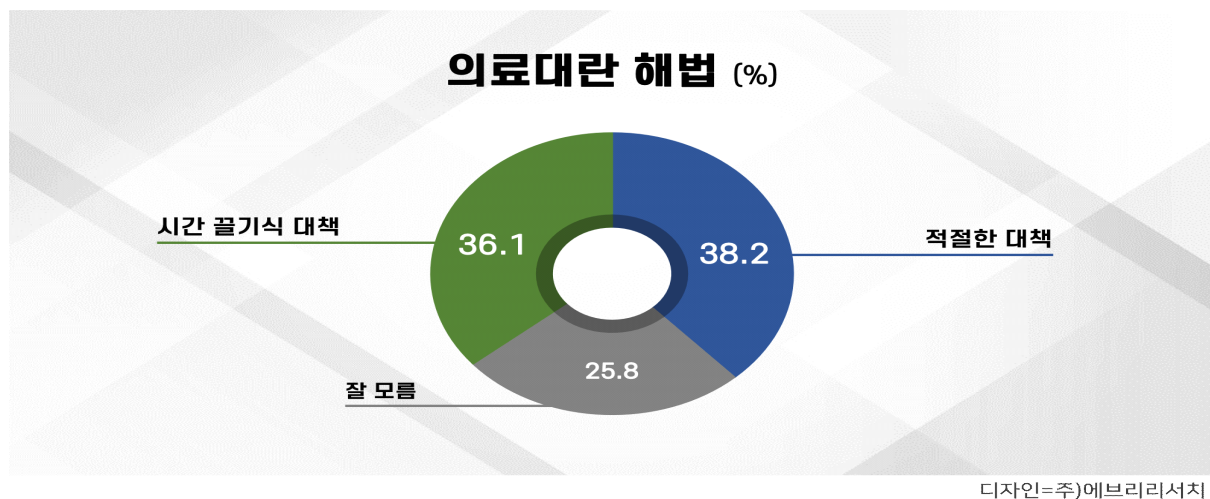
[표 7] 지방 의료 붕괴 위기

구분		사례 수		지금 처럼 의료인의 자율에 맡긴다 ①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전형을 확대한다 ②	비수도권 의대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③	지역 의료인 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잘 모르 겠다 ⑤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4.9	21.6	30.2	40.1	3.2
성별	남성	276	247	6.8	22.1	28.4	40.7	1.9
	여성	224	253	3.1	21.1	32.0	39.5	4.4
연령	18-29세	55	77	6.5	24.6	24.4	44.5	0.0
	30대	73	75	8.4	22.1	27.7	40.0	1.8
	40대	95	88	7.4	21.2	31.5	38.2	1.7
	50대	105	96	2.0	23.0	31.0	40.8	3.3
	60대	92	87	5.7	18.4	29.9	44.3	1.8
	70세 이상	80	77	0.0	20.5	36.2	32.4	10.9
지역	서울	114	94	3.5	17.5	37.5	35.7	5.7
	경기/인천	142	160	4.6	22.5	29.4	42.7	0.8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10.1	15.4	32.1	40.0	2.4
	광주/전남/전북	49	48	6.2	28.2	32.0	31.2	2.4
	대구/경북	47	50	3.9	21.3	24.3	48.1	2.4
	부산/울산/경남	94	72	2.6	26.5	26.6	38.7	5.5
	강원/제주	14	21	7.1	17.7	21.3	46.3	7.5

8. 의료대란 해법

질문) 정부가 필수의료 사망사고 면책도입,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 제도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 의료개선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38.2%,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36.1%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25.8%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남성 39.9%,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36.5%로 정부 의료개선책에 대한 남녀 시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정부 의료개선책에 대해 20대(44.0%)·40대(40.3%)·60대(35.2%)에서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비중이 높았으며, 30대(40.5%)·50대(38.8%)·70세 이상(43.5%)은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서울(36.8%), 경기/인천(40.6%), 광주/전남/전북(33.9%) 지역에서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비중이 더 높았으며, 대전/충남/충북/세종(43.9%), 대구/경북(40.3%), 부산/울산/경남(40.3%), 강원/제주(41.4%)에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 상이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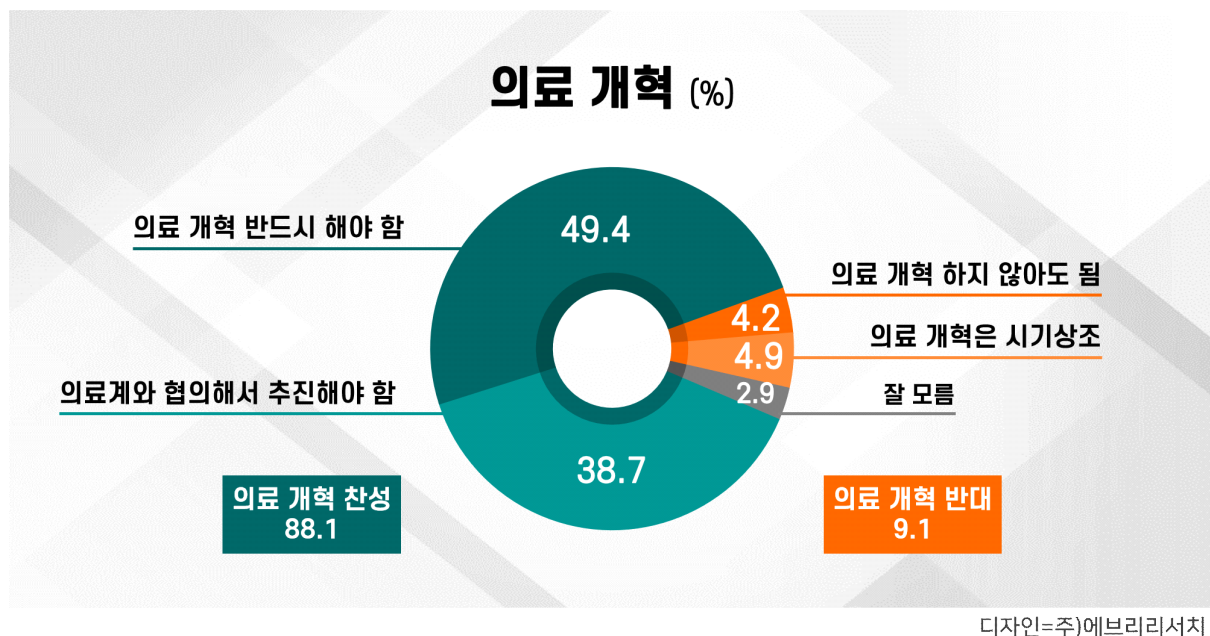
[표 8] 의료대란 해법

구분		사례 수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①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36.1	38.2	25.8
성별	남성	276	247	35.6	39.9	24.4
	여성	224	253	36.5	36.4	27.1
연령	18-29세	55	77	44.0	36.9	19.1
	30대	73	75	39.7	40.5	19.8
	40대	95	88	40.3	36.1	23.6
	50대	105	96	38.6	38.8	22.6
	60대	92	87	35.2	34.0	30.7
	70세 이상	80	77	17.6	43.5	39.0
지역	서울	114	94	36.8	35.8	27.3
	경기/인천	142	160	40.6	37.5	21.9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32.0	43.9	24.1
	광주/전남/전북	49	48	33.9	31.7	34.4
	대구/경북	47	50	36.1	40.3	23.6
	부산/울산/경남	94	72	34.5	40.3	25.2
	강원/제주	14	21	19.0	41.4	39.6

9. 의료개혁

질문) 선생님께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전체 조사 결과,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한다’ 49.4%,
‘의료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38.7%, ‘의료 개혁은 시기상조다’ 4.9%,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4.2% 순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 2.9%로 조사되었음.



- 성별 조사 결과, 의정 갈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남성(90.2%), 여성(86.1%)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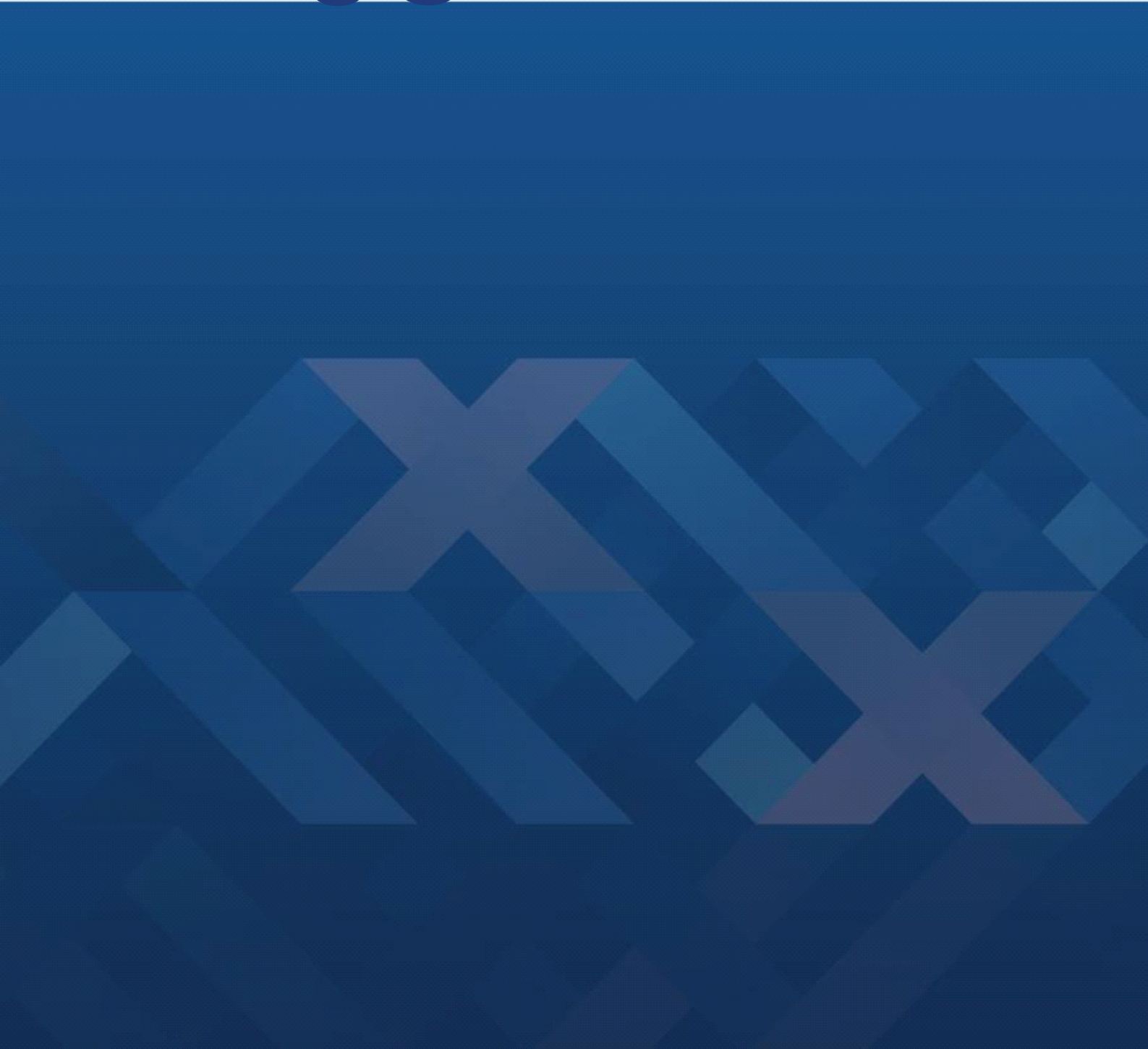
- 연령대별 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서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특히 30대(97.2%)에서 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의료 개혁 반대는 20대에서 13.0%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조사 결과, 모든 지역에서 의료 개혁 찬성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경기/인천 지역에서 92.6%가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에서 16.4%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 개혁 반대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9] 의료 개혁

구분		사례 수		의료 개혁 찬성	의료 개혁 반대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①	의료 계와 협의 해서 추진 해야 한다 ②	의료 개혁은 시기 상조 다 ③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조사 완료	가중값 적용							
전체		500	500	88.1	9.1	49.4	38.7	4.9	4.2	2.9
성별	남성	276	247	90.2	7.8	53.5	36.7	3.6	4.2	1.9
	여성	224	253	86.1	10.1	45.4	40.7	6.0	4.1	3.8
연령	18-29세	55	77	82.5	13.0	54.2	28.3	5.6	7.4	4.5
	30대	73	75	97.2	1.0	60.4	36.8	1.0	0.0	1.8
	40대	95	88	92.0	7.9	52.5	39.5	5.0	2.9	0.0
	50대	105	96	86.9	11.4	40.2	46.7	4.0	7.4	1.6
	60대	92	87	90.9	7.6	46.6	44.3	5.8	1.8	1.4
	70세 이상	80	77	78.6	12.7	44.9	33.7	7.8	4.9	8.7
지역	서울	114	94	91.1	7.0	49.7	41.4	3.7	3.3	1.9
	경기/인천	142	160	92.6	6.7	55.4	37.2	3.9	2.8	0.8
	대전/충남/충북/세종	40	55	78.4	16.4	37.8	40.6	7.5	8.9	5.2
	광주/전남/전북	49	48	82.9	12.1	48.4	34.5	10.2	1.9	5.0
	대구/경북	47	50	86.3	8.7	40.6	45.7	0.0	8.7	5.1
	부산/울산/경남	94	72	85.2	12.2	47.0	38.2	7.9	4.3	2.5
	강원/제주	14	21	92.4	0.0	64.2	28.2	0.0	0.0	7.5

03 부록(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국민 여론입니다. 저희는 의료정책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브리리서치이며 전화번호는 02-786-6662입니다.

응답자 선별 문항

연령) 선생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17세 이하면 1번) (→비적격)

18세에서 29세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50대면 5번)

60대면 6번)

70세 이상 이면 7번을 눌러주세요.

지역) 선생님의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이면 1번)

경기/인천 이면 2번)

대전/충남/충북/세종 이면 3번)

광주/전남/전북 이면 4번)

대구/경북 이면 5번)

부산/울산/경남 이면 6번)

강원/제주 이면 7번을 눌러주세요.

성별) 선생님께서 남성 이면 1번, 여성 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여론조사 문항

[의대 증원]

Q01.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의사협회는 정부에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보기 ①~③ 로테이션)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해야 한다면 1번)

의협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 2번)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면 3번)

잘 모르겠다면 4번을 눌러주세요.

[의사 집단행동]

Q02. 선생님께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③ 로테이션)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1번)

정부가 요구 조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2번)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면 3번)

잘 모르겠다면 4번을 눌러주세요.

[의대생 수업 거부]

- Q03.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1,500명 늘어난 25학번 신입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복귀해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1번)
 의대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

- Q0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③ 로테이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1번) → Q4-1로 이동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2번) → Q5로 이동
 초과한다고 생각한다면 3번) → Q5로 이동
 잘 모르겠다면 4번을 눌러주세요. → Q5로 이동

[의대 정원 확대 규모]

- Q04-1. 그렇다면, 의대 정원 확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④ 로테이션)
 동결이면 1번)
 500명 미만이면 2번)
 1,500명 미만이면 3번)
 1,500명 이상이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공공의료 분야 최우선 정책]

- Q05. 공공의료 분야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④ 로테이션)
 공공병원 추가 설립이면 1번)
 의대 정원 확대면 2번)
 의료수가 인상이면 3번)
 의료인 처우 개선이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방안]

- Q06. 현재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④ 로테이션)
 진료비 인상이면 1번)
 전공의 등 즉시 복귀면 2번)
 전국 응급실 네트워크 구축이면 3번)
 중증질환 전문응급실 개설이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지방 의료 붕괴 위기]

Q07. 의료인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의료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의료인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④ 로테이션)

지금처럼 의료인의 자출에 맡긴다면 1번)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전형을 확대한다면 2번)

비수도권 의대 출신 의료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면 3번)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의료대란 해법]

Q08. 정부가 필수의료 사망사고 면책도입,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 의료개선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시간 끌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 1번)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의료 개혁]

Q09. 선생님께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해소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기 ①~④ 로테이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1번)

의료계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면 2번)

의료 개혁은 시기상조라면 3번)

의료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조사완료)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 적 격)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조사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할당초과)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연령대나 지역은 응답 초과로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인 쇄 일	2025년 3월
발 행 일	2025년 3월
연 구 총 괄	인요한 국회의원실
수 행 기 관	(주)에브리리서치
전 화 번 호	02-786-6666